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공개토론회 개최

서울 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가 주최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공개토론회가 8월 29일 오후 프레스센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전력에너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원자력발전 및 방사능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부지선정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국민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마련한 이 토론회는 학계와 산업계 및 언론계, 환경보호 단체의 인사들이 대거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서울대 사회학과 홍두승 교수는 “원자력과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서울대 원자핵 공학과 강창순 교수는 “원자력의 효용성 및 안전성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같은 대학교의 환경대학원 김안제 교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기준과 지역 개발”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2부 순서에서는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용수 회장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임용규 부원장 및 한국과학기술원 장순홍 교수가 찬성토론을 했으며, 공해추방운동연합 최열 의장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민의 모임 김재옥 사무처장이 각각 반대토론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대학교 부설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는 1964년에 설립되어 인구 및 경제문제와 사회발전분야의 연구를 담당해 온 권위있는 기관이다. 이 연구소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번 토론회에 이어 대구, 전주, 강릉, 대전 등 4개 지방도시에 대한 순회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다음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공개토론회” 지정토론회 참석자와 발언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참석자 : 이용수(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
최 열(공해추방운동 연합 의장)
임용규(원자력안전기술원 부원장)
김재옥(소비자보호를 위한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장순홍(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이용수 원자력은 다음의 두가지 차원을 전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활과 국가발전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현대과학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전제입니다.

불안의 요소는 현대문명의 이기(자동차 등)에도 적용되는 만큼 원전이 안전하느냐는 문제는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돼야 합니다. 이런 개념에서 보면 원자력 발전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이 세계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소련의 체로노빌 원전에서 사고가 났지만 이 시설은 40년대의 노후시설이고 설계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즉, 과학적인 불안 요소를 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자력에 대한 시각은 몇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집단(신념집단)은 스스로 판

단함으로 누구의 설득이나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정부의 확고한 상용조치가 따른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은 어느정도의 불안요소를 내재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며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최 열** 원자력홍보의 문제점은 찬성 또는 사업자측 입장에서만 홍보하고 반대파를 배제하는데 있습니다. 핵은 안전하다 핵을 뒤틀어 묻어도 된다. 방사선은 많이 죽어야 면역이 생긴다 등의 홍보는 곤란합니다.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원전의 신규건설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고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사고확률은 낮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그 위험은 아주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소는 건설 초기에는 경제성이 높았지만 점차 안전성이 강조되면서 이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경제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화력(석탄)발전이 가장 경제적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선진국에서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고 실증된 예도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확증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사업추진은 부당합니다. 앞으로 원전사업은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 **임용규** 방사선은 안전하게 취급할 경우 불안요인은 없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은 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독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방사선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연방사선이 우리의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중·저준위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를 중간 저장하는 시설로서 이미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것

들입니다. 방사선을 놓고 볼때 원자력발전소 보다도 폐기물 처분장이 훨씬 안전합니다.

• **김재옥** 주제발표에 있었던 기초의식조사 결과를 볼때 국가사업입안자의 폐쇄성 때문에 정부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응한 사람들은 핵, 원자력, 방사능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응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관은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즉, 안전성의 경우 실증적인 자료를(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제공하여 국민의 합의하에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안전하게 생활하여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은 배제할 권리도 있습니다.

집단주의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사표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회교육도 필요하고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역공청회보다는 더욱 실질적인 정보제공과 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순홍**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준위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은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고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에서 원자력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화력발전에 비해 암, 사망률 등이 단위 kW당 30배나 안전합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필요한 것은 밀고 나가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안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서는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역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